

轉換期에 先 韓國 大學教育의 進路

鄭 範 謨
(翰林大 敎養敎育部)

긴 航海 길엔 가끔 軌道修正이 필요하게도 된다. 순풍을 안고, 역풍도 만나고, 돌풍도 일며, 그에 따라 잔 파도, 큰 파도도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제도 수정은 모자라더라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별의 方位는 잃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風浪 속의 제도 수정도 결국 그 별을 향해야 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필자의 서론이며 동시에 결론이기도 하다.

주어진 主題인 “轉換期에 先 韓國 大學教育의 進路”라는 제목에 대해 필자는 약간의 저항감을 느낀다. 그것은 너무 時流를 탄 듯한 제목이라는 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한편 정말 지금이 ‘轉換期’가 될 것인가라는 위구심과 또 한편 과연 전환기가 된다 해다 大學教育이, 이 주제의 어감이 풍기듯, 그렇게 時風, 時流를 타고 확 변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지금이 곧 ‘전환기’를 結實할 것이라고 믿기에는 지난 날 우리는 그런 期待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했다. 8·15 해방으로 들었던 기대도, 4·19 혁명으로 부풀었던 기대도, 그리고 10·26의 변으로 끝난 유신 체제의 붕괴 이후 걸었던 기대도 轉換이라기보다는 일종의 ‘還元’을 경험했을 뿐이었다. 壓制의 제도 수정이

지나쳐 放縱을 낳고, 放縱의 제도 수정이 지나쳐 다시 다른 壓制로 환원되는 時計 추의 흔들림과 같은 악순환만을 경험해 왔다. 이렇게 몇 번인가 놀랜 가슴은 이번 6월의 사건들을 전환기라고 믿기엔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두려움을 안게 된다.

大學 社會도 이 사회의 일부인 만큼, 사회의 振動의 영향을 아니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社會의 시계 추 흔들림과 똑같은 振幅으로 大學도 그 운영과 교육 체제를 바꿔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大學엔 그동안 그렇게도 ‘恒心’이 없었던가? 도리어 大學이야말로 정치적·시국적 變革에 가장 超然할 수 있고, 그렇도록 허용되고, 그렇도록 애써야 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大學은 가져야 할 恒心, 있어야 할 本然을 찾아가는 일에 더 專心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일련의 自問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壓制의 더 큰 죄악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무너질 때 放縱·無秩序를 몰고 온다는 것이고, 放縱의 더 큰 죄악은 그 자체보다도 그것이 混沌에 이를 때 壓制를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이번 轉換期의 시계 추는 歷史의 생산적인 進展을 적당히 자극할 만큼의 그만만큼의 振幅으로만 흔들려 주었으면, 그래서 風浪 속에서도 별의 方位에 몇 발짝이라도 갈 수 있었으면 하고 우

선 염원해 본다.

昨今 확실히 거의 한 革命에 가까우리만큼 風向은 바뀌었다. 民主化 또는 自律化라는 그 바람은 이 사회 여기 저기에서 새 파랑을 일으키고 있고, 大學도 그 圈外일 수는 없다.

또 지난 날 大學에 불어온 정치적 強風과 그것을 타고 덮쳐온 행정적 權威主義는 그 연유야 어떠했던 줄 너무 심했다. 그것은 대학들을 窒息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히 빈혈 상태로 몰아갔다. 구체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자질구레한 예로 예컨대, 문교부는 각 대학의 大學志願書式을 정해 주기도 했고, 國定 敎養科目을 정해 주고 敎職科目도 科目名과 그 각각의 學點數까지도 정해 주고, 대학의 이런 저런 研究所의 규정도 고쳐 주고, 대학 교수에게 학기말 成績算出方式도 시달렸고, 學生指導 방법 지시는 더 이상 세밀할 수가 없었다. 곰곰 생각하면 奇異하기 짝이 없고 대학 교수를 로보트화한 이런 일들이 거의 당연한 것으로 慣行된 여러 예를 여기에 더 이상 列擧할 필요는 없고, 이제는 다 지나간 물결에 흘려보내야 할 일들일 것이다. 흘려보내고 새 물결 속에서 새로 제도 수정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전환기적인 省察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야말로 此際에 별과 같은 恆心과 本然의 모습에 대한 새삼스러운 성찰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轉換期的 문제건 本然追求의 문제건 한국의 대학에 문제들은 점점으로 쌓여 있다. 그만큼 오랜 세월 한국의 대학은 역풍에 시달려 왔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그 여러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여유도 없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필자의 意見을 굳이 개진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전환기적 문제들은 '自律化'로, 本然 추구의 문제들은 '秀越性'로 응징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밝혀 보려 한다. 이 둘은 秀越性 추구 없는 自律化의 추구는 맹목이고, 自律化 추구 없는 秀越性 추구는 허망일 수 있다는 관계에도 있다.

自律化의 과제에서는 大學의 脫政治化가 무엇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7月 改閣 때, 新·舊 문교부장관은 離·就任辭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같

이 학원의 脫政治化의 소망에 언급했다. 前장관의 말, "문교부와 대학은 정치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 1번지가 되었다"라는 회한과, 新장관의 말, "문교부가 시국 문제에 매달려 교육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호소는 모든 政治人들이 새삼 경청해야 할 敎育界의 소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敎育과 政治와의 관계는 敎育의 脫政治化, 敎育의 政治的 중립 또는 독립, 敎育의 政治와의 訣別 등의 표현으로 간단히 처리해 버릴 수는 없는 여러 측면을 가지고는 있다. 예컨대, 한 나라의 敎育의 테두리와 支援資源은 政治過程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든가, 敎育 여하는 한 나라의 정치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가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與件 野견 흔히 愛國의 호소로 위장된 政權 여탈의 이해 관심만은 學園 밖 저 멀리에 멈추어 있어야 하는 것은 民主 사회에서의 敎育과 정치의 原初的 關係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아마도 政治人들이 이 원리는 알면서도 그 '禁斷'을 지키고 있기에는 敎育界가 때로 군침이 돌고 때로는 두려운 너무나 큰 勢力이기 때문에 그 禁斷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革命·政變 때마다, 執權勢力은 그 바람을 몰고 敎育부터 대수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政治人들은 學園을 이용해서도 안 되지만, 실은 겉으로 보듯이 그렇게 쉽게 이용 당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만하고, 또 원칙적으로 敎育의 무대는 이 社會라기보다는 저 歷史라는 사실도 다시 인식할 만하다. 이런 것을 이해하는 이가 '政治人'이 아닌 '政治家'의 한 자질일까 생각도 해 본다.

대학의 自律化가 治外法權化를 뜻하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거기에 엄숙한 責務性이 수반되는 것을 되새겨 볼 만하다. 대학 사회가 그에게 맡겨진 任務를 다 못하는 정도에 따라 대학 사회도 어떤 모양으로 問責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때로는 그 問責이 자칫 어떤 모양의 他律 狀況을 몰고 올 가능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自律의 실패는 他律

을 불러들인다는 간단한 원리 때문이다.

우리는 他律의 여러 가지 危害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람직하게 여기는 능동, 개척, 실험, 혁신 그리고 創意性, 自發性, 責任感을 고갈케 하는 토양이다. 그래서 그리도 자주 거듭되는 교통 질서 운동, 자연 보호 운동, 서정 쇄신 운동이 그리도 긴 세월 實效가 없는 것은 그리도 긴 세월 他律에 찌든 탓이라 생각도 해 본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 人間이 스스로가 人間임을 느낄 수 있는 自律의 길을 막고, 또 한편 노예에게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는 자에게 倫理를 물을 수 없기에 근본적으로 非人間的 그리고 非倫理的인 풍토다. 그래서 人間은 극도의 압제, 빈곤, 재난, 불안의 상태 이외에서는 의당 他律을 참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他律을 싫어하는 정도로 동시에 自律의 峻嚴함도 그 길이 險難함도 다시 한번 각오해야 할 것이다. 거기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바로 選擇·決定하는 지혜와 責任·責務를 피하지 않는 용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도의 사회적 感受性과 사회 倫理意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없이는 自律은 비효율, 무질서, 혼돈, 파탄에 빠질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익히 경험해 왔다. 오죽해야 어떤 이들은 “人間은 자유이기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이기로 저주받고 있다”고 했고, “自由는 걸머지고 다니기가 힘겹게 무거운 보물”이라고도 했고, 혹은 “民主主義는 다른 어떤 형태보다도 나은 최악의 통치 형태”라고 했을까?

大學의 경우, 그 任務는 그 기원에서부터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社會가 필요로 하는 고급 知識과 人力을 공급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人間의 끝 없는 知識 탐구의 욕망을 풀어가는 일이다. 大學의 責務性은 바로 후에 논할 大學의 敎育과 研究의 秀越性 추구에 있다. 이 일들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대학 사회에서 그 ‘聖語’인 대학의 ‘自由’, ‘自律’, ‘自治’가 어느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責務는 어느 경우 어떤 모양 어느 정도로 물어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길고 긴 세계의 大學의 歷史에서 갖은 토론과 ‘실험’도 거쳐 왔고, 그리고 아마도 더 계속되어 갈 문

제일 것이다. 그동안 他律에 찌든 大學을 지금 自律化하는 일에서 그 방향을 시계추의 논리보다는 이런 歷史에 照明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 역사에서도 自律과 責務性은 언제나 문제의 表裏를 이루었다.

대학 自律化는 또한 여러 측면의 開放化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방 없는 자율화는 자칫 각종 鄉黨化, 朋黨化, 그로 인한 退化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대학들에 갇고 있는 각종 閉鎖性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것은 가능한 한 빨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學問의 발전은 그 본질상 異質, 異色, 異見들의 개방적인 相互作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近親 교배로 인한 退化와 獨尊은 거의 必至인 것이다.

敎授採用에서 同門 출신, 同鄉 출신을 선출하는 대학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대해 公採 形式이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채라는 형식보다 開放의 정신일 것이다. 교수 채용에서 同鄉, 同門도 좋지만 그보다 先行되어야 할 조건은 敎授 資質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지난 날 시카고大學 헛친스 총장은 교수 채용에서 일부러 각 學科에 學問的 ‘葛藤’이 일어나도록 理論流派가 다른 교수들을 채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적이 있었다. 그러던 反目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正反合으로 새 발전의 터전이 생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總·學長은 그 大學 敎授內에서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치 한 當爲처럼 不文律化되어 가려는 추세도 실은 한 폐쇄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總·學長 선임에서 同學, 同門도 좋지만 그보다 先行 條件은 명백히 그의 學問的 그리고 行政的인 지도 역량인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大學에서 他國일 뿐만 아니라 한때 敵國이었던 독일의 학자 다렌돌프를 총장으로 선임한 때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開放性의 예일 것이다.

開放은 대학간의 개방, 같은 대학내 學科間的 敎授나 科目의 개방, 敎授間的 강의 內容, 강의 方法의 개방 등도 생각할 수 있다. 대학의 敎育課程, 敎育方法의 계속적이며 실질적인 개선은

이런 開放 없이는 어렵다. 퍼놓지 않고 감추어만 두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研究를 위한 多産的인 着想에도 이런 개방이 필요하다. 개방 상태에서의 다른 理論, 다른 學問間的 아이디어의 생산적인 交配는 자주 있는 현상이다. 他律 狀況 아닌 自律 상황에서는 指示에 따르기보다 서로 배우고 서로 交流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이 또한 開放을 요구한다.

大學 行政도 필요할 경우에는 何時라도 그 財政, 人事 등 行政 事項을 公開할 수 있는 태세에 있어야 한다. “專制主義는 걸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이 지저분하고, 상대적으로 民主主義는 걸으로는 지저분하지만 속은 깨끗하다”는 현상은 바로 民主體制의 開放性 때문이다. 民主體制에서는 함부로 私事를 公開함도 禁忌지만, 함부로 公共事를 隱匿함도 금기인 것이다. 이는 不正, 不信의 원천을 없애려는 것이다.

나아가 自律化는 多樣性을 전제로 하는 그야말로 對話, 상호 이해, 妥協의 습성적인 덕목을 필요로 한다는 자명한 이치를 꺼내는 것이 도리어 쑥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昨今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한 그런 덕목도, 습성도, 경험도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을 심각하게 自認하는 데에서부터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우리에게 도리어 ‘純粹, 선명, 志操, 절개’가 덕목이고, ‘외곡과 고집과 막무가내’가 습성이었던 셈이다.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쫓대 없는 변덕, 약골, 모순, 변절, 배신, 배반, 기회주의’로 간주한다. 그래서 한번 敵이 된 자는 영원한 적으로 남고, 派와 派는 갈라지고, 생각과 생각은 융합할 줄을 모른다.

그것이 政治건 勞使건 學園이건, 한 나라의 民主와 한 기관의 自律이 이런 덕목, 이런 思考, 이런 습성으로는 지탱되어 가기는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뻔하다.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죽어도’ 굽히지 않는 절개를 지켜야 할 영역과 ‘큰 마음 써서’ 양보·타협할 수 있는 영역을 區分하는 일, 그리고 前者를 최소로 좁히고 後者를 최대로 넓혀가는 일, 그럼으로써 視角과 思考의 유연성, 탄력성을 기르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大學 안에도 各계, 各층, 各색이 있다. 自律化

의 물결 따라 이들의 아이디어와 의견과 요구가 그야말로 百出하고 충돌도 일으킬 것이 뻔하다. 그러나 피차 이런 視角의 유연성, 思考의 탄력성을 유지한다면 自律化는 결실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教授들이 總·學長 選任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만약 비슷하게 學生들이 教授 選任에 어떤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은 東洋의 師父論理에 비추어 전혀 말도 안 되는 悖論으로 일축해야 할 것인가? 현대적 형태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탈리아의 옛 볼로냐大學에선 學生들이 모여서 教授를 선임했다. 대학의 주인이 학생들이었던 셈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최초 대학인 옥스포드大學과 파리大學에선 教授가 學生을 선발했다. 교수가 대학의 주인인 셈이다. 요새 미국 대학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식상 理事會가 주인인 셈이다. 오늘날 세계의 大學들은 이런 歷史的 경험들을 제 나름으로 절충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이 하고 있는 學生에 의한 教授評定制는 옛 볼로냐大學의 전통을 現代版으로 절충·수정한 것이라는 視角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종래에 없이 피차 視角의 유연성, 思考의 탄력성을 필요로 하는 물결 속에 있으며, 孔子의 말씀대로 同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和를 찾으려 해야 할 물결 속에 있는 셈이다.

대학의 自律化가 時流 속 풍랑을 헤쳐가는 문제라면, 대학의 秀越性 추구는 별을 찾아가는 恆心的인 문제다. 自律化는 이를 위한 제도 수정이며, 수월성 추구 없이는 자율화도 무의미하다. 대학의 임무가 社會에 고급 人力을 공급하는 敎育과 知識의 邊境을 개척하는 研究이기 때문에, 대학의 수월성은 곧 敎育의 수월성과 研究의 수월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는 이를 구체적인 네 가지 과제로서 내일의 한국 대학의 수월성을 그려보려 한다.

우선 韓國의 大學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 人力, 특히 博士級 人力을 自他가 공인하는 수준으로 自體 養成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한국도 여러 大學에 碩士 과정, 博士 과정이 있고 많은 大學院 學生도 있다. 그러나 한국 大學 자체

가 그 教授採用에서 명백히 外國 博士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연유야 어찌든 自體 大學院 課程을 스스로 不信하고 있다는 가장 단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어느 企業體에서 100여 명을 자랑하는 博士級 研究員 중 國內 博士는 3,4명에 불과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찌다 미국의 大學들을 방문하면 웬만한 大學엔 한국의 대학원 유학생이 200명, 300명의 대부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인상으로나마 그 수는 매년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자랑일까? 그런가 하면 日本人 대학원 학생은 여간해서 볼 수가 없다. 日本은 벌써 終戰前에 高級人力의 自體 養成體制를 自他 공인의 수준으로 이룩해 놓은 셈이다. 外國 留學 그 자체를 왜국적 또는 국수주의적으로 언짢게 여김은 아니다. 우리는 博士級 教育이 그들의 것과 匹敵한 것으로 피차 공인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른바 先進國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느냐는 것은 재미 있는 문제다. 우선 어느 정도의 經濟的 豊요를 배놓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生産的 이면서 安定된 政治도 자주 거론되는 요건이다. 게다가 더 바람직하게는 社會道德의 성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무엇보다도 그 위에 文化的 生産性—學問, 藝術, 思想의 生産—이 높아서 外國에서 學問을 배우려면, 藝術을 배우려면, 思想을 배우려면 한국에 가야 한다는 국제적 公論이 이는 날이 가장 중요한 先進 指標라고 믿는다. 그만큼 한국의 大學·大學院이 秀越할 수는 없는가? 풍랑 속에서도 그런 날을 바라보고 싶다.

이것과 밀접히 관계되는 秀越性의 또 다른 모습은 土着化라는 표현으로 거론될 수 있다. 艱斷絶의 세월에서 해방된 후 그동안 外國 文物의 受容에 급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고 긴요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逆輸出’을 計劃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土壤’에서 概念化되고 法則化되고 理論化된 것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의미에서 土着化를 바탕으로 한 國際化라 해도 좋다.

우리는 외국에서 형성된 外生的인 概念, 방법,

법칙, 이론을 수용하고, 그것을 한국의 토양에서 검증하고 활용하는 것을 일종의 壯大라고 생각하는 응졸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응당히 필요했고, 지금부터도 필요한 일이다. 또 대조적으로 한국의 토양에만 맞는 독특한 理論, 그러나 밖으로의 수출성, 適用性은 거의 없는 이론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제 보다 바람직하게는 한국의 토양에서 內生的으로 概念, 방법, 법칙, 이론들을 형성해 가면서 그것을 외국에 ‘수출’해서 그 토양에서 검증케 함으로써 보다 普遍的으로 타당한 것으로 발전시키려는 野心을 가질 만하다. 그것이 또한 先進의 모습이기도 하다. 풍랑 속에서도 그런 날을 바라보고 싶다.

다음으로 秀越性 있는 대학은 그 모든 층의 大學生을 落伍 없이 모두 다 훌륭하게 教育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강한 教育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학이 엘리트만을 教育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다. 한국의 대학은 같은 年齡層 젊은이의 3분의 1을 수용하고 있다. 개별적으로도 전체로서도 한국의 대학은 넓은 여러 能力層, 經驗層, 動機層 등 여러 사회 階層의 여러 가지 目的을 가진 학생들을 받아들여 教育하고 있다. 그야말로 유니버시티가 아닌 멀티버시티를 형성하고 있다. 教育의 수월성은 지적 정수분자만을 받아들여 教育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천재도 둔재도 받아들였으면 다 낙오 없이 훌륭하게 教育해 낼 수 있는 것이 教育의 수월성이다.

大學에 받아들인 다음에 가서 鍾才라서 가르치지 못하겠단든지, 學習 동기가 약해서 가르치기 어렵단든지……하는 말은 실은 그 大學의 教育的 虛弱性을 드러내는 말일 뿐이다. 鍾才라고 남이 버린 학생, 動機 不足이라고 남이 내던지는 학생을 훌륭하게 教育해 내는 대학도 있고 教授도 있으며, 이런 教育을 뒷받침할 수 있는 教授理論, 學習理論도 있다. 문제는 그런 熱意와 理論과 支援을 동원해서 教育 秀越性을 갖추려 하지 않는 데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卒業定員制는 教育的으로는 결정적인 自體 矛盾을 애당초부터 내포한 정책이었다. 100명을 가르쳤으면 어떻게든지 100명 다 일정 成就 水準 이상으로 이끄는 것이 教育的 열의와

양심이어야 할 것을 억지로라도 30 명을 탈락시켜야 한다는 것은 슬픈 정책이었다. 그것은 敎育 秀越性 추구를 斷絶시킨 정책이었던 셈이다. 대학과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도 탈락되어야 할 學生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空前 커트라인으로 정해질 문제는 아니었다.

한국의 대학들이 매년 받아들이는 30 만의 學生들이 累故 없이, 고의적인 脫落도 고의적인 及第도 없이, 모두 다 실질적으로 제각기 目的하는 바 일정 수준 이상의 成就를 이루고 卒業하는 날, 풍랑 속에서도 그런 날을 바라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국 大學의 秀越性이란 한두 대학이 아니라 全國의 모든 대학이 제각기 다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이 말은 大學間의 여러 가지 隔差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所得의 심한 격차가 그리하듯이 大學間의 심한 격차와 그에 따른 隔差意識은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심한 違和感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地方’大學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中國語로 ‘地方’이란 본래 東北地方, 西南地方과 같이 方位를 뜻하는 어감이 강한 말이지, 우리처럼 ‘서울 대 地方’이라는 二分論에 쓰이는 말은 아니라고 들은 바 있다. 영어의 ‘로컬’, ‘프로빈스’도 제각기의 고장이라는 뜻이지, 이 또한 서울에 대한 시골 전부라는 뜻은 아니다. 유독 우리만 ‘地方’을 서울에 대한 시골의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 그 배경에는 아마도 몇 천년을 두고 한국에 회오리쳐 온 거센 서울指向주의가 숨어 있고, 이 때문에 그야말로 地方의 모

든 것의 相對的 ‘푸대접’이 이 나라에 傳統化된 느낌도 있고 그 實例도 수없이 많다. 그 속에 ‘地方’大學도 들어가 있고, 그만큼 地方大學의 수월성 추구는 더 힘들어 수밖에 없다.

發展이란 결국 全國의 발전을 의미해야 하며 다시 先進國의 또 하나의 指標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地域間의 均衡일 터인데 이 점에서도 한국은 갈 길이 아직 멀다. 특히 地方大學의 相對的 落後가 서울指向을 더 부채질하는 악순환에 빠져 우리는 빠져 있다. 全國 地域의 大學들이 무슨 연유에서이든 이처럼 심한 隔差感을 주지 않는다면, 나아가 도리어 地方大學들이 더 좋다는 방향으로 差等感이 바뀐다면, 한국민의 높은 敎育熱로 미루어 그것은 아마 이른바 ‘地方化時代’의 가장 큰 原動力, 정치적 地方化, 경제적 地方化의 힘보다 훨씬 강한 地方化 또는 全國化의 原動力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 없다. ‘地方’大學이라는 總稱이 없어지고 全國의 大學들이 서로 유난스러운 隔差 없이 여기 저기에 所在하고 있는 大學들이라고 인식되는 날, 풍랑 속에서도 그런 날을 바라보고 싶다.

새 바람이 불고, 새 파도가 일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社會도 大學도 이에 따라 제도 수정해야 할 轉換期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불행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 제도 수정은 처지지도 넘치지도 않는 適正일 것을 기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야할 곳 별의 그림자는 우리 마음 속에 더욱 또렷이 빛을 잃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